



전용기(왼쪽부터) 원내수석부대표, 천준호 원내수석부대표,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 발의... “일극 타파·남부권 성장축”

광주·전남, 전남·광주 대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30일 거대 여당 黨論으로 공식 발의했다.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와 국토 남부권 거점성장축 구축을 궁극적 목적으로 한 이 특별법은 설 연휴 전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고, 자치권 강화와 산업 생태계 재편, 재정·규제 특례를 골자로 하고 있다.

당·정과 지역 정·관계를 중심으로 한 입법 속도전과 압축 공론화에 따른 부작용과 우려는 법안 심사와 법정부 태스크포스(TF) 협의 과정에서 수정·보완될 예정이다.

◆“수도권 일극 깎아”...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 공식 발의

30일 더불어민주당과 광주·전남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광주·전남,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법적 기반이 될 특별법 2건을 당론으로 제출했다. 당초 다음 달 2일로 예상됐으나, 당내 입법지원단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날 발의가 이뤄졌다. 법안 명칭은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초광역 자치권, 산업·에너지·AI ‘올인’, 재정·규제 특례에 ‘초점’ 명칭은 ‘전남광주특별법’, 약칭 ‘광주특별법’... 청사는 3곳 분산 與 당론 “설 연휴 전 처리”... 속도전 부작용·우려점은 보완키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으로, 전남·대전 특별법과 재정 목적과 주요 내용, 법안 열거 등이 유사하기는 하나, 특례 등 고유 조항 등에서 차이가 있어 ‘이러한 쌍둥이 법안’으로 볼 수 있다.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은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를 통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행정효율성 제고, 인공지능(AI)·반도체·에너지·모빌리티 등 첨단 미래먹거리와 스마트농업 등 산업 생태계 전환에 초점이 뒀고, 초광역 자치권 보장과 재정·규제 특례, 지역 개발과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에 방점을 찍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 법안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권역별 성장축을 형성, 실질적 지방 분권과 재정 자립을 도모하는 동시에 국가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총 8편, 30여 장, 380개 조문... ‘특별법의 꽃’ 특례 300개 안팎

특별법은 총 8편, 30여 장, 380개 조문으로 구성됐고, 핵심인 특례조항은 300개 안팎에 이른다. 자치권 강화부터 첨단·산업, 문화·관광, 농수축산, 교통·의료에 이르기까지 통합 이후 지역민들의 삶과 직결된 특례들로 구성돼 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규제 완화와 재정 지원을 통해 광주·전남을 국가 전략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 특례의 핵심 취지다.

우선 기존 행정 체제인 ‘광주시’와 ‘전남도’를 폐지하는 대신 ‘전남광주통합특별법’(약칭 ‘광주특별법’)이라는 법 인격을 신설

하고, 청사는 전남 동부, 무안, 광주 청사를 균형감 있게 운영토록 했다. 기능에 따른 분산형 청사시스템인 셈이다.

총칙 제1조에 ‘광주 정신’을 명확히 했고, 정부가 밝힌 ‘매년 5조원, 4년간 20조원’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담보하고, 이후 지속적인 재정 안정을 위해 국제 세목(稅目) 이양과 우대, 총리실 산하에 별도기구인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부시장을 4명까지 둘 수 있고, 교부세 산정과 지방채 발행, 지방세 감면을 특례로 묶어 고질적인 재정가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개발과 AI·반도체·에너지·모빌리티와 함께 스마트 농업 집중 육성에도 힘을 실었다.

총액인건비 규제를 배제하고 독자적 인사권을 행사할 길도 법적으로 보장했고, 의회독립과 교육자치권, 광역교통망에 대한 특례, 공공기관 우선 이전과 기업 유치를 도울 지렛대 규정도 다수 포함됐다. (2면에 계속) /기동취재부

광주시, 어린이집 보육료·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인상

보육정책위, 보육료 월 8000원·필요경비 연 10만8000원 인상
 학부모 부담없게 보육료 수납한도액 인상분 전액 지방비 지원

광주시가 올해 민간·가정 어린이집 3~5세 보육료와 필요경비의 수납한도액을 인상해 보육환경 개선에 나선다. 다만 보육료 한도액은 인상하되 인상분 전액을 지방비로 지원해 학부모의 실제 부담은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최근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2026년도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심의·의결하고, 이를 30일 결정·고시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보육료는 지난해보다 월 8000원 오르고, 필요경비는 연 10만8000원 인상된다. 2026년도 보육료 수납한도액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은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는 어린이집이 부모로부터 수납할 수 있는 보육료와 필요경비의 한도액을 결정하고 있다.

정부지원시설은 정부가 정한 보육료를 따르되,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3~5세반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지난해 대비 각각 8000원이 인상됐다. 이는 어린이집 운영과 물가상승, 최저임금 인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광주시는 이번 보육료 인상에 따른 학부모 부담을 없애기 위해 무상보육 실현 차원에서 인상된 차액 보육료 전

액을 지방비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학부모가 실제로 부담하는 어린이집 필요경비(7개 항목) 중 특별활동비, 차량운영비, 아침·저녁 급식비 등 3개 항목의 수납한도액을 연 10만8000원 인상하고, 나머지 항목은 동결했다.

광주시는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2023년 9월부터 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해왔으며, 지난해 7월 정부의 단계별 무상보육 확대 정책 시행(2025년 5세→2026년 4세→2027년 3세, 7만원)에 따라 국가사업으로 전환됐다. 이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3세 아동에게 월 5만원을 소급 지원했으며, 올해는 4세까지 무상보육을 전면 시행한다.

이번에 고시된 ‘2026년 어린이집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의 세부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달라지는 보육정책은 ▲부모 부담 필요경비 확대(4세 10만원) ▲누리과정보육료 추가지원 확대(3세 5만원)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단가 인상(760원→930원) ▲0세반 교사 아동 비율 개선 지원금 및 아침돌봄수당 신설 ▲영유아 발달 컨설팅 대상 확대(3세→2세 추가) ▲보육교직원 보육 활동 보호 강화 등이다. /전광훈 기자

전남도, 설 명절 다중이용시설 162곳 안전 강화

전통시장·요양병원 등 점검해 위험 발견시 조치·사고 예방

전라남도는 설 명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9일부터 전통시장과 버스터미널, 대형마트, 요양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162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한다.

전남도는 귀성객과 도민이 밀집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위험요인을 면밀히 점검해 화재·붕괴·가스 등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점검 과정에서 나온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은 설 전까지 보수·정비를 완료

할 계획이다. 중대해 위험요인은 발견 즉시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응급조치를 한 뒤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시설물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를 한다.

점검반은 도와 시군, 전기·가스안전공사, 소방서, 민간 전문가, 시설관리자 등으로 구성되며 ▲시설물 주요 구조부 균열·누수 등 결함 ▲소방·전기·가스시설 관리·운영 실태 ▲비상구·복도·계단·승강기 등 피난통로 상시 확보 여부 ▲건축·소방·전기·가스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 확인한다. /염선호 기자

Goheung Spaceship Terminal

지구문명에서
우주문명으로

제16회 고흥 우주항공축제

2026.5.2. (토) - 5.5. (화)

고흥군 봉래면 나로우주센터 일원

주최/주관
고흥군 우주항공축제위원회